

情報社會(Information Society)와 民主主義

뉴미디어活用의 政治的 明暗

安 清 市

(서울大 政治學科 副教授)

<차례>

- | | |
|-------------|------------------|
| 1. 머릿말 | 3. 通信媒體의 政治的 機能 |
| 2. 情報社會의 明暗 | 4. 맷는말：自由를 위한 情報 |

1. 머릿말

오늘날 인류는 高度情報社會라는 「第三의 물결」을 맞고 있다. 선진 산업사회는 현재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고도로 심화되고 있는 정보사회로 급속히 이행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정보사회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바야흐로 사회적 이목은 정보사회가 가져다줄 혜택과 편익에 대한 기대에 집중되고 있다. 확실히 오늘날의 통신기술이 지니고 있는 위력은 엄청나다. 그리고 정보사회를 통하여 실현될 인간생활과 사회에 대한 혜택의 잠재력 또한 무한하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발명품이 그러하듯 통신기술과 정보사회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인간의 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다를 수 밖에 없다.

정보기술이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이미 선진 각국에서 분분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의 눈이 아직까지 정보社会의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어 그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은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실현시켜 주기도 하지만 이를 침식 할 수 있는 잠재력도 항상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사회가 이들 문제와 위험에 대처하는 노력과 정책적 뒷바침을 소홀히 한다면 이에서 파생되는 효과는 자못 우려되는 바도 크다. 우리 사회도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이 물고을 새 물결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社会의 도래를 민주적 사회가치와 발전적 국가이익에 맞도록 그 방향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을 뒷바침하는데 도움될 문제제기를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문명은 인간이 깨우침과 재앙사이에서 벌이는 줄다리기 경기와 같다고 웰즈(H.G. Wells)는 말한 바 있다. 교육과 연구는 이 줄다리기를 깨우침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간이 서로 힘과 뜻을 합하자는 정신을 담고 있다. 우리에게 장차 도래할 정보사회의 희망과 함께 그것이 줄 충격과 위험을 따져보는 것은 앞날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는 학습능력을 길러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을 피해가자는 뜻에서이다. 그런 뜻에서 우선 이 글은 정보기술과 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사회발전과 국민생활의 전개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과命題들을 살피고 이를 통해서 이론과 정보사회의 도래가 미래의 정치와 사회에 줄 역설적 교훈을 끌어 내 보고자 한다. 역사상 정보기술과 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무지와 암흑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구실도 하였지만 동시에 권력과 부와 명성을 소수에게 편중하도록 하거나 현상을 정당화하고 다수의 의견을 조종하는 무기로도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통신매체가 주는 불편과 부자유는 기술과 매체가 갖는 위협적 성격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인간의 실책과 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점이 이 글의 테마를 이룰 것이다.

2. 情報社會의 明暗

사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 정보통신은 우리몸의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이란 정보를 생산, 축적, 가공, 유통, 또는 공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보통신혁명의 제 1 단계는 인쇄술의 발명으로 비롯되었고, 이는 출판, 신문, 우편 등의 정보체계를 등장시켰다. 제 2 단계의 정보통신혁명은 1837년 모르스가 전신을 발명함으로써 시작된 전기통신 즉 텔리카뮤니케이션 기술로 비롯되었다. 전기통신의 발명은 시간과 거리를 극복하고 눈깜짝할 사이에 대단히 많은 정보를 유통가능하게 하였다. 오늘날의 사회는 전기통신이 없이는 한시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전화와 천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은행의 자동예금지불기, 철도, 비행기, 호텔 예약시스템, 신용카드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여러가지 생활은 전기통신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통신은 그 외에도 방송, 컴퓨터, VTR통신을 가능케

하며, 팩시밀리와 전자우편, 비데오텍스(Videotex), 부가가치통신망(VAN), 쌍방향 케이블 텔레비전(CATV) 등 고도로 발전된 뉴미디어(new media) 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발전된 전기통신은 소위 정보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거의 무한정으로 순식간에 입수하여 활용 가능케 해 주고 있다.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은 경제구조와 고용체계를 대폭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GDP의 15%를 넘고 있으며, 취업인구의 35~45%를 수용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의 성장속도와 변화율의 폭을 보아도 정보통신산업은 공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을 모두 앞지르고 있어 현대산업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뉴미디어의 출현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지역사회와 정치, 그리고 국제사회를 대폭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의해 만들어질 미래사회를 사람들은 고도정보사회로 부르기도 한다. 고도정보사회는 뉴미디어를 통해 홈쇼핑(home shopping)과 홈뱅킹(home banking)이 가능해져 일상생활이 매우 편리해지며, 여유있고 질적으로 풍요해진 생활이 실현되리라고 한다.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의 네트워크가 고도화되어 산업활동이 효율화되고 경제생활도 대폭合理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양한 뉴미디어에 의해 서울과 지방의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그 결과 독자적인 지역문화, 자립적 지역사회, 분권화된 행정, 참여적인 정치민주화가 올 것을 내다보기도 한다. 국가간의 콤뮤니케이션과 통신정보기술의 겹도 해소되며, 상호 이해가 한층 더 원활해져 평화로운 세계가 올 것으로 점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¹⁾

산업사회를 대체하는 정보사회의 정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²⁾ 참여민주주의란 의회민주주의와 대별되는 형태이다. 의회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 代表를 선출하고 이들이 국민

(1)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 견해로는 다음을 참조. Daniel Bell, *The Coming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73), Fritz Machlup,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ilson P. Dizard Jr., *The Coming Information Age* (New York: Logman, 1984).

(2)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Bantam Book, 1981); John Naisbitt *Megatrends* (Warner Books, 1982).

을 대신하여 지방과 중앙의 정치를 담당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직접 지방정부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광범하고 직접적인 方法으로 참여한다. 왜 정보사회가 도래하면 代議制 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로 바뀔 것인가에 대하여 「정보사회」(*The Information Society*)란 저서를 통해 일본에서 이 방면에 대한 많은 논의를 일으킨 마쓰다 요네지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

첫째, 정보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일보다 自己實現欲(self-realization)에 의해 행동한다. 사람들은 自己實現을 위해 물질적 부를 구하는 일보다 정보획득과 정보활용을 중시하게 되며, 이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려는 행동유형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 국가권력과 기업의 힘은 매우 팽창되어서 이들 거대조직이 내리는 결정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공해 문제, 인플레 등 사람들의 안위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들을 이들에게만 맡겨 두는 것을 사람들은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오늘날의 사회가 당면하는 많은 문제는 특정 국가의 영역을 넘어 범지구적 차원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그 해결은 인류 전체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나 국제기구의 공식적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국경을 초월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구폭발과 자원고갈을 막자면 모든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거나 자발적으로 둘 이상은 안녕기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인류가 당면한 과제들을 이와 같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풀어가자면 시민의 광범한 동의와 참여를 허용하는 정치체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代議制民主主義體制가 장차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바뀌어 가는 네번째 이유는 최신 컴퓨터 기술과 뉴미디어의 발전에 크게 기인한다. 지금까지 인원, 비용, 시간 및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채택할 수 없었던 직접민주주의 方案들이 앞으로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쉽게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상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장차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인간 生活의

(3) Yoneji Masuda, *The Information Society as Post-Industrial Society* (Tokyo: Institut for the Information Society, 1981), pp. 101-103 참조.

변화를 내다보았다. 인간이 자기 표현을 기록하고 상호교환할 수 있는 기술은 놀라우리만치 발전했다. 전기통신은 맨손으로 인쇄기가 하던 일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해낼 수 있게 하였으며, 컴퓨터 기계는 아무리 큰 도서관의 장서라도 누구나 손쉽게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생각하는 기계가 생기고, 지구의 아무곳에서나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집안에 앉아 아무하고 무슨 일이던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계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곧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는 꿈도 못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기계 장치는 인간의 문명을 계속 떠받들어 주고 진보하는 길로 이끌어 줄 것인가? 인쇄술, 라디오, 전화, 컴퓨터, 인공위성 등 정보 기술의 발전은 모두 인간의 自由를 신장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를 기술과 함께 겸열제도, 언론통제, 정보의 편중과 조작 등 각종 규제와 억압의 기록도 점점 더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뉴 미디어의 발전과 정보사회가 가져올 부자유와 위험에 대해서도 따져 보아야 한다.

정보사회가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主張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라야만 가능하다. 첫째로 모든 정보는 공개적이며, 정확해야 하며, 누구나 손쉽고 평등하게 이용가능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의 행동패턴이 공동목표에 합의하고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合理性를 지녀야 한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치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시민들의 혜택과 희생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시민들이 다같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일단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결정 및 집행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히 기술발달이나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다. 정보는 항상 누군가에 의해 숨겨지거나 변조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컴퓨터케이션의 수단과 기술은 독점화되기 쉽다. 정보정책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상유지에 집착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람마다 모두 똑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도 힘들며 더구나 계층, 직업, 성별, 종교, 나이 등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도 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누구나 정보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정보량이 많아져 정보의 홍수에 빠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문가가 판단해 준 정보에 쉽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에만 집착할 우려가 있다. 점점 복잡하고 많아지는 정보의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창조적 사고의 결핍증에 걸려 여러가지 사회병리적 행동이 나타나거나 전체 주의화를 부채질할 위험도 없지 않다.⁽⁴⁾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축적·유통시킨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개인권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될 공산이 크다. 정보의 수집과 기술은 공공복지나 국가안보, 기업활동의 자유 등 유익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악용이나 독점, 왜곡 및 조작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이것들은 곧 권력의 강화와 집중화를 촉진시키고 통제사회를 출현케 할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회체계와 경제구조 속에서는 정보사회란 각종 국민생활이나 산업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집중화와 통제화 및 기업화와 대규모화를 가져오기 쉽다. 그렇게 될수록 또한 자연재해, 설비고장, 범죄 및 실수의 위험과 사고의 가능성도 증대한다.

정보社会의 출현과 뉴 미디어의 등장은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도 그 明暗이 엇갈리는 意義를 지니고 있다. 모든 부문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전기통신이 국제교류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막중하다. 국제전화, 프로그램의 송수신, 텔레스, 데이타전송 씨어비스 등이 확대되는 속도는实로 눈부실 정도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술과 네트워크 이용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보를 집중하거나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⁵⁾ 후진국 측에는 이처럼 경제·문화·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4) Eric Fromm,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H.R. & W., 1963).

(5) Herbert I. Schiller, *Information and the Crisis Economy* (Norwood, N.J.: Ablex, 1984) and *Who Knows: Information in the Age of Fortune 500* (Norwood, N.J.: Ablex, 1981). 정보社会의 출현과 그 미래를 종속시각과 비판적 입장에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Cees J. Hamelink, *Cultural Autonomy in Global Communications: Planning National Information Policy* (New York/London: Longman, 1983).

Gerald Sussman,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the Third World: Theoretical Considerations," *Media, Culture and Society*, 1984:6, pp. 289-300.

Hanid Mowlana, *Global Information and World Communication* (New York: Longman, 1985); Mahdi Elmandjra, guest editor, "Information: Is There a Choice?", *Development* 1985:1.

정보에 대한 대의의 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점점 더 느끼고 있다. 전기통신분야의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집약적 전략산업인 까닭에 그 자체가 나라 사이에 경쟁과 갈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UN이나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와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정보질서」 등 통신분야에서 세계 질서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더 세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유통의 불균형, 정보정책상 국가의 자유재량권문제, 정보기능 및 통신기반기구의 남북간 격차 등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明과 暗을 동시에 지닌 정보사회의 출현을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와 自由 및 平和의 가치와 양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우선 통신매체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정치적 기능을 재음미하는 데서부터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3. 通信媒體의 政治的 機能

통신매체는 흔히 政治的 定向의 형성자와 政治社會化의 중요한 매개체로 꼽힌다.⁽⁶⁾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통신 매체는 여려가지 유형의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보나 이 사건들에 대한 평가는 통신매체를 통해 정부에서 국민으로, 집단에서 집단, 집단에서 개인, 그리고 옐리프에서 비옐리프로 전달된다. 이러한 전달과 확산과정은 의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되는 수도 많으며, 직접적으로 이루어 지기도 하거나 와간접적·우회적으로 되기도 한다. 통신매체의 기술이 확대되고, 오늘날처럼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와 같은 전통적 구조와 매개체가 약화될수록 통신매체는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럴수록 政治的 定向의 형성자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통신매체는 근대화와 국민통합에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충성심과 정치적 촛점을 한 쪽으로 모으고, 중앙집권화된 행정, 국민의 광범한 참여와 동원을 이룩하는 과업에 통신매체는 필수적이었다. 전통사회가 근대화를 이

(6) 여기에서 논의된 바는 다음 저서를 많이 참조하였음.

R.E. 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 (Little Brown, 1977).

鄭世九譯, 「政治社會化」(法文社, 1981), 第十章.

루어 가려면 표준화된 가치를 보급시키고合理的인 행동양식을 배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다수에게 근대화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신매체가 社會化와 정치교육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통신매체는 國民合意를 발전시키고 정치지도자의 이미지를 창출하거나 지도자의 선출에도 큰 힘을 미친다. 케네디는 미국의 국민들에게 리더쉽의 이미지를 창조하여 닉슨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워터게이트사건에 대한 광범한 텔레비전보도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여론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사업을 홍보하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는데 통신매체는 빼놓을 수 없는 무기가 되고 있다.

뉴 미디어의 발달과 정보화社会의 도래는 통신매체의 정치적 중요성을 더욱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는 새로운 변화와 진보를 약속한 것인가 아니면 현존의 정치구조를 보다 강화시킬 것인가?

통신매체의 정치적 기능을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들 필요가 있다.

첫째로 통신매체는 그 자체가 정치적 정보의 생산자라기 보다는 매체 밖에서 얻어진 정치적 정보의 전달자이다. 정치적 정보의 주요 소스(source)는 매체 밖에 있는 정부, 관료, 또는 정치지도자들이다. 따라서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이들은 이들 “政治人”(political man)들이다. 매체의 관리자들은 다만 어떤 종류의 정치적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할까에 대하여 제한된 선택권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政治人들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갖는 정치적 동기와 이해관계에 비추어 정치적 정보를 생산한다. 한편 매체관리자들은 통신회사의 이익이나 기타 그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 그들의 제한된 선택권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치 정보의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政治的 계산과 고려에 의해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통신관리자들의 선택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로 통신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은 매체가 직접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우보다 중간단계의 흐름을 거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우선 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소수의 여론지도자 또는 意見先導者들에게 도달하며, 이들을 통해 대중에게 해석되고 전파된다. 이들은 신문기자나 논설위원, 전문가, 목사나 교사, 조직의 우두머

리나 지역사회 활동가들로서 고객들이나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메시지의 내용을 재해석하거나 때로는 변형하여 전달한다. 정치정보의 경우는 다른 부문보다 더욱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매체를 가까이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대중의 정치정향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막중하다. 이때문에 매체의 메시지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개개인의 수준에서 수용되거나 해석되는 경우보다 개개인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집단의 조직적 특성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셋째로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적 위치나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접하게 되는 매체의 종류나 수신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 위치나 환경은 개인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법 즉 정치관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 든 통신매체의 정치적 성격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첫째로 정치정보의 제공자나 통신매체의 관리자는 항상 공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안전과 매체산업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보원을 은폐하거나 정보내용을 변경할 것이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은 정확한 정보 대신 변형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에 접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둘째로 통신매체의 기술이용 가능성과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열려 있지 않다. 따라서 통신매체의 사용에 따른 혜택 또한 평등하게 분배되기 보다는 개인이 접하는 사회적, 정치적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배분되기 쉽다. 셋째로, 이상의 이유때문에, 통신매체는 새로운 政治定向이나 變化를 창조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것은 통신매체의 성질상 주요 메시지는 사회권력의 보유자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여 취사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매체의 현상유지기능은 또한 정보수요자의 성격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통상 그들이 듣는 것이 생각하는 바와 일치할 때는 매체에 귀를 기울여 듣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매체의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통신매체는 사람들이 새 아이디어를 갖도록 전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못된다.

정보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이 글의 주제에 되돌아가서 지금까지 고찰한 사실들의 의미를 음미해 보면, 우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정보매체의 본질적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인쇄기, 전

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공위성 등은 모두가 인간 사고의 축적과 지식의 신속한 전달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신장해 주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이들 기술은 그 자체로는 자유에 대해 위협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정보매체의 기술발전은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⁷⁾ 이命題는 앞으로 利用可能해질 뉴미디어들에게도 그대로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뉴미디어들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한층 신속하게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에 접근 가능케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유에 대한 도전은 그러므로 뉴미디어 자체보다도 인간이 이를 사용하는 지혜와 특히 정치적 선택에 크게 달려 있다. 불행하게도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인간의 깨달음과 특히 「국가의 學習能力」⁽⁸⁾ (The Learning Capacity of Nations)은 너무도 뒤지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추세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훨씬 뒤지고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정보사회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것이다. 정보社会의 도래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복음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파국과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는 따라서 우리들이 얼마나 혁명한 판단과 정책을 수립할 능력을 쌓아가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풀교수(Ithiel de Sola Pool)의 말처럼 “21세기의 컴퓨터화된 정보망들을 아무런 장애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쇄기를 사용하던 사람 못지 않게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실책이 컴퓨터화된 정보망을 부자유 스럽게 할 수도 있다.”⁽⁹⁾ 우리사회는 이런 실책을 범하지 않는데 필요한 교육체제 수립과 정책선택의 능력을 提高할 준비를 갖추어가고 있는가?

4. 맷는말 : 自由를 위한 情報

통신매체는 民主主義의 근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에

(7) 이 점에서 메스컴의 역할을 차본주의적 해개모니를 위한 이념기제로만 보는 네오마르크시즘이나 통제기제적 차원에 치중하는 비판이론적 시각은 다같이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이 말은 UN大學총장 Soedjatmoko씨의 *The Learning Capacity of Nations*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 1980)에서 따옴.

(9) Ithiel de Sola Pool, *Technologies of Freedo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元佑鉉譯, 「자유언론의 테크놀러지」(전예원, 1985) pp. 304-305.

대해 적절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通信과 情報에 대한 정책, 법제, 절차는 사회 및 정치적 풍토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고도정보화사회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정도 공통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도 많다. 민주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세 물결이 밀려올 때 발생되는 파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기술의 활용이 안으로는 민주적 사회가치와, 밖으로는 국제평화 및 균형된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의 집중화와 조직화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둘러싼 심각한 논의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여년간에 걸쳐 주로 선진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법적 제도화의 노력도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눈은 아직까지 이 문제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코뮤니케이션이 自由와 양립하려면 소수 특권층은 물론 정부마저 통신수단을 독점적으로 관리 또는 소유해서는 안된다. 통신매체의 시장구조는 자연스런 독점의 요소를 안고 있다.⁽¹⁰⁾ 특정분야의 커뮤니케이션—이를테면 전화, 케이블 TV, 신문 등—에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여건하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봉사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정보기술의 발전을 고대하는 주된 이유는 보다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쉽게 이용하고 또 싼 값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전달하는데 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자유언론을 위해 그 폐해를 규제하려는 민주주의적 충동이 바로 정보의 自由를 구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정책수립자들의 실수나 무지, 몸에 밴 관료주의적 관행으로 인한 독점이나 경영의 실체 등등으로 부터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책과 장치는 정보매체의 독점소유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와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뉴미디어시대가 自由를 위한 情報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기술발전의 혜택이 엘리트의 이익에만 봉사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보기술은 주로 대기업, 군사 및 관료조직의 이익

(10) Pool, 전개서 pp. 308-326 참조.

에 봉사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을 보다 집권화하며, 모든 것을 서울로 집중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국제관계에서도 정보기술은 국가간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기술은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줄이고 조직과 개인 및 정부와 국민,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뉴미디어 出現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결국 인간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선택에 달린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가치에 얼마나 확고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政策과 制度를 마련해 가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

정보혁명에 대한 오늘의 논의는 역사상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있어왔던 비관론과 낙관론의 반복현상과 유사하다.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그 결과를 보는 눈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했었다. 낙관론자들은 기술혁신이 가져올 혜택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혜택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책과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소홀하였다.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결국 노예화 시킬 것이라는 결정론에 빠져 인간의 의지와 선택의 여지에 눈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이 두 관점은 다같이 기술의 힘을 과대평가함으로써 文明이 마치 기술의 종속체라는 神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기술이 文明의 產物인 만큼, 文明이 깨달음과 재앙사이의 줄다리기에서 어디로 끌려가느냐에 따라 기술은 自由의 方便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第二의 產業革命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본다면 역시 文明은, 비록 재앙의 씨앗을 안고 있기는 하나, 깨달음과 지혜를 축적시키는 편으로 인간을 끌어당겨 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우리는 비관보다 낙관쪽으로 기울어도 안전하리라고 생각된다. 第三의 혁명—정보혁명—은 다행하게도 第二의 혁명이 갖지 못했던 몇 가지 특성 때문에 낙관의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해 주고 있다. 예컨데 뉴미디어의 정보기술은 그 성격상 지금까지 규격화, 획일화, 집중화, 대규모화 되었던 사회를 다양화, 개인화, 분산화, 소규모화하도록 해 준다. 그것은 소수의 취향과 약자의 권리를 다수의 횡포로 마음대로 누를 수 있는 체제를 가능케 하며, 分權化와 직접참여, 보다 分業化된 政策決定體系를 계획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를 쉬 해결해 준다. 또한 뉴미디어는 원하기만 한다면 무한한 情報를

손쉽게 취득하고,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와 객체간의 쌍방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채널을 이용가능케 해 준다. 더구나 오늘날 정보혁명은 그 여파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는 상이한 文化와 체제간의 접촉과 교류를 더욱 촉진시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올바른 리더쉽과 정책,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의식과 자유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감시 장치를 잘 갖추어가는 한 정보사회의 도래는 자유를 낙관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